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86호
----------	--------

제출년월일 2023. 9.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정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상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원의 위원회 참여 제한)에 의거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삭제 정비
- 나. 구성원 범위 확대
- 당연직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 관련 분야 국·소장으로 구성
 - 위촉직 의원은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 다. 위원회 기능을 전문가 및 환경단체 분야를 보강하여 구성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6. 16. ~ 7. 6.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붙임)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붙임)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환경부 기후전략과

나) 경 기 도 : 기후환경정책과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제3항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1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분야 국·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전문가 2명
 -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

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를 “수행하기 어렵다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후에너지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기후에너지과 김 진 량
	팀 장 직위·성명	기후정책팀장 임 송 미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환경서기 이다숨(☎536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 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 -----. 1. ~ 7. (현행과 같음) 8. ----- ----- 시장-----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 위원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시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 4. (생략)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분야 국·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전문가 2명
 -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 위원-----

-----.

1. (현행과 같음)
- <삭 제>
2. ·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 수행하기 어렵다는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의회의 고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또는 조례를 근거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거나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견조사, 여론수렴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제3조 (의원의 위원회 참여 제한)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직접 정한 경우
2. 위원회 성격이 단순히 의견조사, 자문, 여론수렴 등에 한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라도 의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김포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김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시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 「김포시 위원회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제1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0조(탄소중립도시의 추진)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해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한다.

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 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

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 훼손으로 감소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조성할 수 있다.

제26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김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김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28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3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79조에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 경기김포067

정 책 명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담당자명

김지연

전화번호

031-980-53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6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후에너지과)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정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상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가.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원의 위원회 참여제한)에 의거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삭제 정비

나. 구성원 범위 확대

- 당연직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 관련 분야 국·소장으로 구성

- 위촉직 의원은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다. 위원회 기능을 전문가 및 환경단체 분야를 보장하여 구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 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야 함을 제시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7월 4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김포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배정민/031-980-5582)

기후에너지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대상 조문

개 정 안	개선의견
<p>제11조(위원회의 구성)</p> <p>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 정책 관련 분야 국·소장</p> <p>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u>탄소중립 정책 관련 전문가</u> 2명</p> <p>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u>지식과 경험이 풍부</u>한 사람</p>	<p>(개선권고)</p> <p>제11조: ‘관련 전문가’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미가 모호하고 개인마다 이와 관련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학위’ 또는 ‘관련 분야 경력 몇 년 이상’ 등의 예측 가능한 추가 규정을 명시하여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함.</p>

□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구체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제11조 : ‘관련 전문가’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결정하는 부정부패가 생길 위험성이 있고, 정확한 명시가 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저해됨.

□ 검토결과

○ 개선권고안을 참고하여 해당 조례에 적합하게 개정